이슈페이퍼 2023-02

KCTULI

글로벌 경제블록과 한국경제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

2023. 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 1

1. 무역수지 급감 ····· 2

2. 미중 무역 패권전쟁 ····· 8

3. 세계화의 쇠퇴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 13

4. 경제블록화와 한국경제 ····· 22

요약

2022년 지속되던 무역수지 적자는 2023년 1월 역대 최고치인 127억 달러로 증폭되었다. 이는 수출주도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 신호로 볼 수 있다. 실제 1996년 20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감소를, 계절적 현상이나 중국 코로나 범람 등에 따른 단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안이한 태도이다. 무역적자와 수출감소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신냉전 경제블록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수출의 감소이다. 2023년 1월 중국 수출이 31.4%나 감소했고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반도체 수출 부진이 아니라 대중국 반도체 수출 부진이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홍콩 경유 포함)는 중국으로 간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중국 대체 시장으로 유럽, 아세안, 중동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미국은 기존 비용절감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국 중심으로 핵심기술과 생산설비를 배치하고 있다. 즉 가치동맹의 경제블록 내에서 반도체, 전기차, 전기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제품을 생산하여 중국·러시아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에는 공급을 차단하고 기술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성이 커서 한쪽의 경제블록에 가입하면 무역이 축소되어 큰 타격이 받는다. 특히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홍콩 포함)과 에너지와 원자재 부국인 러시아 시장이 제약되면 '대중 수출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물가상승' 등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한다'라는 전략하에, 수출 대기업 지원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시간·임금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침체의 근본 원인이 신냉전 경제블록에 의한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산업의 국내생산 유지·확대', '중립적인 외교통상', '재정확대로 민생지원' 등을 우선해야 한다.

첫째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을 유지·확대해야 한다. 국내설비의 해외이전은 고용, 세수, 관련 산업, 지역경제 등의 축소를 초래하여 총생산이 감소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칩4

동맹’ 등에 따른 핵심산업의 과도한 미국 투자는 곤란하다.

둘째 자국 민중 이익을 중심에 놓는 외교통상 정책으로 원자재와 에너지를 확보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수출이 감소한 만큼 내수를 활성화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부자감세, 규제완화, 노동개악의 친기업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자·자영업자의 소득을 제고하고, 재정확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물가상승만큼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스스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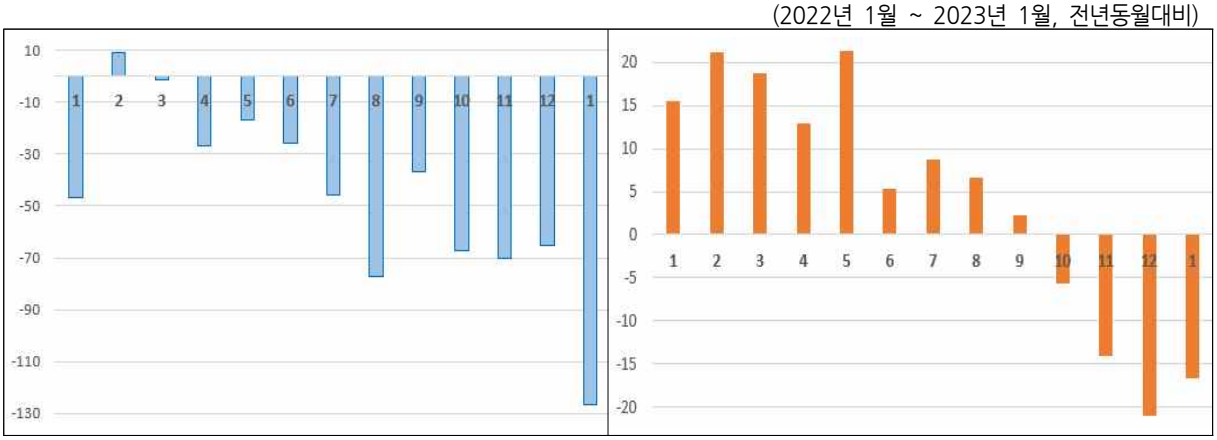
1. 무역수지 급감

2023년 1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12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한 해 무역수지 적자(470억 달러)의 28%에 해당한다.

[그림1]을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작년 3월 이후 11개월째이며, 수출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출주도성장의 상징 국가인 한국이 무역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의 수익 감소, 외환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구조조정과 감원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1] 월별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월별 수출증가율 추이(%)

(2022년 1월 ~ 2023년 1월, 전년동월대비)



자료) 산업자원부(2023.2.1)

2023년 1월 수출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물량은 −4.5%, 수출 금액은 −16.6%로 물량과 가격 모두 감소하였다.

작년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11개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고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4개 품목만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출감소로 인해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97% 하락하였고, SK하이닉스는 4분기 1조 7,012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SK하이닉스는 재고가 쌓여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50% 줄일 계획이고 삼성전자는 라인 유지보수 등으로 감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역적자, 수출감소의 원인

전례 없는 무역적자와 수출감소의 원인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금리·고

물가, 러·우 전쟁 등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확대 속에 올해 1월 수출이 감소했다"라며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주요국 수입 수요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발생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수출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다고 보는 것은 현상적 분석에 불과하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계절적 요인이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도, 현재 상황을 단기적으로 보는 안이한 생각이다.

한국의 무역적자와 수출감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며 경제위기의 시발점일 될 수도 있다. 실제 1996년 206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한 후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최근 수출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 수출의 30%(홍콩 경유 포함)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감소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고 대책을 모색하지도 않는다. 실제 올해 1월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31.4%나 감소했는데,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작년 5월 이후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감소의 원인은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작년 말 코로나 창궐로 중국경제의 둔화',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베트남·아세안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 '한중 수출 동조화의 소멸' 등 여러 가지이다.

먼저 중국기업들이 첨단화, 대형화 되어 중간재의 자체 조달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중간재 및 가공무역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인해 타격이 크다.

둘째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전염병 확산으로 작년 말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하였다. 그러나 1월 초에 정점을 지났고 춘절 소비가 회복되고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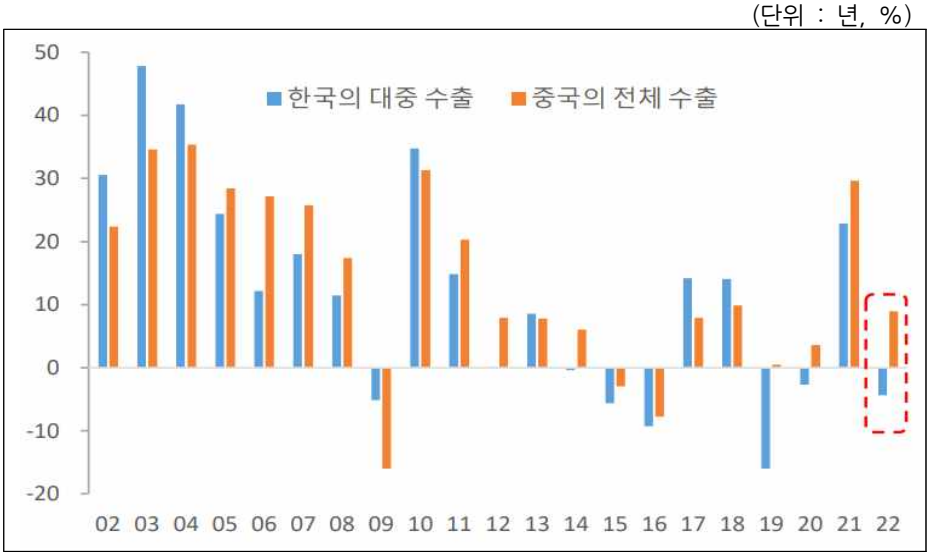
셋째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홍콩 경유 포함)으로 가는데, 미국의 중국제재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한중 무역이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베트남·아세안·미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것도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원인이다.

넷째 이전 5년(2017~2021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중국의 전체 수출(10.3%) 및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6.2%)과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그림2] 처럼 202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4.4%로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7.0%)을 크게 밑돌면서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소멸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 2023).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시장으로 아세안, 유럽, 중동 시장 등을 확대하겠다고 거론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림2] 한국의 대중 및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비교

(단위 : 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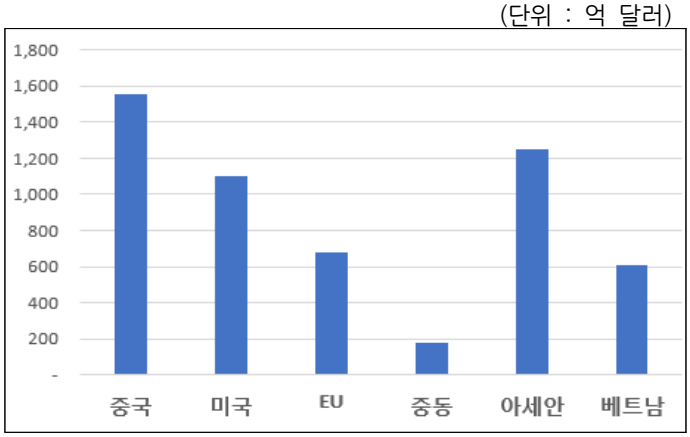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2023.2.1)

중국 수출 감소를 메울 대체 시장 부재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그림3] 처럼 아직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이며, 다음이 아세안(인도, 베트남 제외), 미국, EU, 베트남 순인데 중국과는 차이가 크다.

[그림3] 2022년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 억 달러)



자료) 산업자원부(2023)

[그림4]에서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중국 무역수지를 감소를 대체할 만큼 미국, 아세안, EU 등의 그래프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

[그림4] 한국의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자료) 산업자원부(2023.2.1)
주) 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1월

한·일 무역수지는 만년 적자이며 한·EU 무역수지도 적자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여 경제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아세안,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무역수지가 흑자이나 증가추세는 아니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중동 수출(원전, 건설)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의존도를 메울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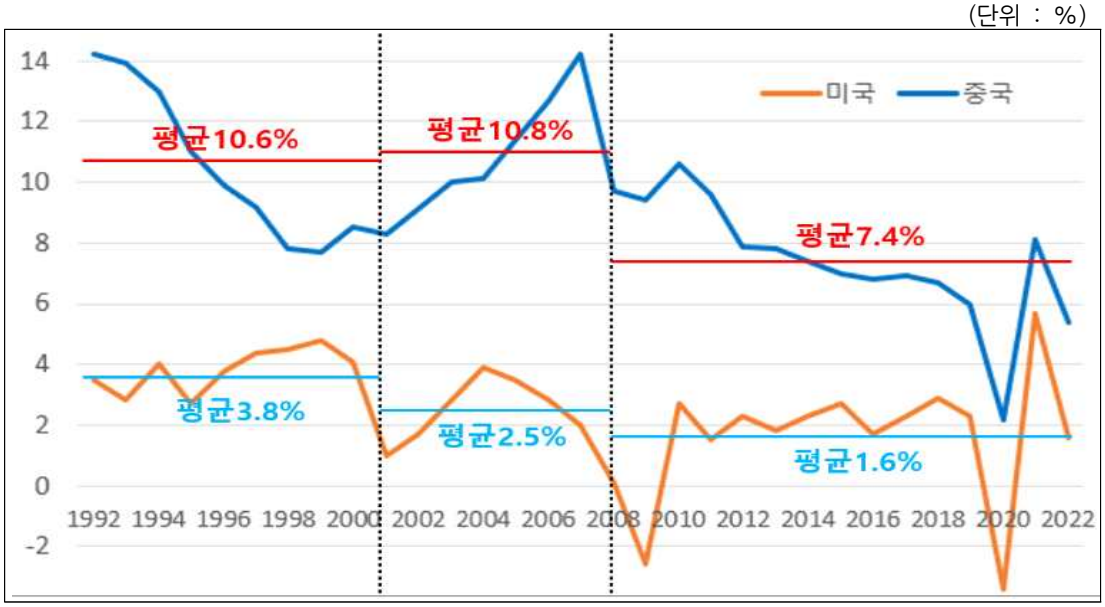
중국 수출감소로 인해 한국의 무역적자가 어닝쇼크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경제주권을 세우고 중립적인 외교통상으로 무역전쟁과 경제블록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중 간의 무역전쟁 원인과 경제블록 형성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미중 무역 패권전쟁

중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근 20년간 8.4%를 기록하여 미국(2.0%)의 4배에 이른다([그림5] 참조).

[그림5] 미·중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자료) 통계청 재가공

중국은 급속한 성장으로 2013년부터 세계 1위 무역국이 되었고, 중국의 GDP는 2022년 미국 GDP의 8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그림6] 참조).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국으로 국가부채가 31조 달러(GDP 대비 130%)를 넘어섰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한계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그림7] 참조)

[그림6] 미국 국가부채 추이

(단위: 달러)

자료) 미국 재무부, 중앙일보(2022.10.6.) 재인용

[그림7] 세계 GDP에서 미·중의 비중(%)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22-07)

미국은 위기 때마다 통화 발행을 남발하여 14년 만에 달러 발행액이 10배로 증가(2022년 말 9조 달러)하였다. 하지만 기축통화 달러는 '무역 결제', '외환보유', '가치척도' 등에 사용되므로 각국은 미국에 수출하여 얻은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산다. 이자가 붙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 국채가 세계적으로 융통되면 미국은 재정적자가 아무리 커도 부채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 규모, 기술력, 자본 등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 위안화 등이 국제통화로 사용되어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달러의 지위가 하락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실제 세계 외환보유고 중 미국 국채의 비중은 20년 전에는 73%였는데 지난해에는 58%로 축소되었다.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중국의 추격은 거세어지는 가운데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면 미국의 경제패권도 쇠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작년 10월 백악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중국 전략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1.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갖춘,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
   러시아는 즉각적 위협이지만 미국 주도 세계가 연합해 그 도발에 대응할 하위 대상국.
2. 탈냉전 시대는 끝났고,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신냉전(시진핑 3선)이 도래
3. 향후 10년은 지정학적 경쟁자(중국)를 제압할 결정적 시기임.

4. 권위주의 국가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 미국 내 투자(핵심기술은 미국 내에 있어야, 전략적 경쟁자의 사용 차단).
   2) 동맹국 및 우방과 연대.
   3)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강한 군대 유지(현대화)

한편 중국은 작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당 창건(1921년) 100년 목표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이어 건국(1949년) 100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실현해야 한다고 아래 표와 같이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와 품질뿐만 아니라 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등에서 강국이 되어야 하며,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핵심기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부유', '군 현대화', '일국양제와 조국통일'을 핵심과제로 지적하였다.

1. 1921년 당 창건 백 년(2021년) 목표 달성 : 빈곤 탈출, 소강사회 건설(의식주 해결)
2. 1949년 건국 백 년(2049년)의 목표 : 중국몽 실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 제조·품질 + 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로 전환(분배)
- 군 현대화, 세계 일류 군대 건설
-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무력사용 포기 안 해
- 경제제재 우려 표시, 핵심기술 반드시 승리 거둘 것

이처럼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해서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중국은,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3. 세계화의 쇠퇴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소련 몰락 이후, 미국 중심 세계화가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되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실물경제의 수익성 저하를 금융투자로 대체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하면서 금융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이점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세계적인 투자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과잉 달러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이 결합하면서 공급망의 비용을 절감하여 30년간 미중 커플링 시대를 구가하였다.

WTO(세계 자유무역 추진 기구)에 가입한 중국은 값싼 상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여 미국, 유로 등의 통화 남발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고, 미국은 중국의 저가상품을 사들여

소비를 즐길 수 있었다. 중국은 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수출로 달러를 벌 수 있었고, 미국은 중국에 국채를 팔아 부채경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미국은 2000~2010년 사이 제조업에서 570만 명이 실직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하층 백인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중국이 big two로 성장하여 경제패권을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 건 트럼프가 등장하여,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표1] 참조) 이주 노동자들을 추방하였다. 나아가 WTO(자유무역 추진)에서 임기 만료된 상소위원들의 재선출을 반대하여 상소 중재재판소가 셧다운되고 무역분쟁 조정 기능이 무력화되었다. 미국이 자유무역(글로벌 공급망 확대)을 거부하고 보호무역(경제블록)을 전면화한 것이다.

[표1] 미 상무부 대중국 수출허가 추이

	금액 기준 (십억 달러)				
	총계 (a)	승인 (b)	거부	미처리	승인율 (b)/(a)
2017년	16.2	15.8	0.02	0.4	97.4%
2018년	3.5	2.5	0.1	0.9	71.4%
2019년	6.8	4.4	0.1	2.3	64.7%
2020년	106.1	29.1	0.5	76.5	27.4%
2021년	544.9	229.4	291.1	24.4	42.1%

자료 : US Commerce BIS

이후 2020년 코로나 창궐로 도시와 항만 봉쇄 그리고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와 곡물 수급 차질 등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원자재, 부품·소재, 철강, 곡물, 차량용 부품,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장비부품 등의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산업의 투입 비용이 상승하였다. 글로벌 소싱의 한계를 경험한 각국은 핵심산업의 국내생산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국과 서방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값싼 에너지와 상품의 공급을 제약하여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제도화시켰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로 가치동맹을 구축하고, [표2]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투자하게 하고 중국·러시아 등 잠재적인 적대국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 투자 시 보조금 지급', '중국 투자 및 핵심기술 이전 금지', '중국·러시아산 부품·원자재 사용 금지' 등으로 경제블록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중국 티벳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가스 사용을 금지하여 작년 하반기 미국의 가스 공급액이 러시아 공급액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액화천연가스는 러시아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5배나 비싸다.

[표2] 미국내 생산확대 법안 및 행정명령

법안	제정	주요 내용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	2021.11	청정기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개선 등에 10년 동안 1,420조 원 투자하여 150만 개 일자리 창출, 21세기 뉴딜정책. 단 미국산 자재 사용, 미국에서 제조하고 완성, 미국산 부품 55% 이상 사용해야 지원
반도체와 과학법	2022.7	미국 내 설립하는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에 365조 원 지원.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 연구개발에 보조금 지원 중국 투자 제한(반도체 장비 제공 금지, 한국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해서는 1년 유예). 미국이 설계와 생산까지 장악하여 반도체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8	전기차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 경기부양책(학자금 대출 확대) + 15% 최저 법인세율 발효 미국 투자에 세금감면 등 지원금, 중국·러시아 원자재와 부품(배터리 등) 사용 금지, 중국·러시아와 거래 제한 명시.
바이오 행정명령	2022.10	미국 내 신약, 바이오 생산설비 확대, 미국 발주 해외 위탁생산 생산 감축, 미국으로 이전

자료) 각 언론사

[표3]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공제조건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표3]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생산요건

대상	세액공제	요건	요구비율(%)						
			'23	'24	'25	'26	'27	'28	'29
핵심광물 (니켈, 리튬 등)	$3,750	①미국 ②미국의 FTA 체결국 ③북미에서 재활용 中 1가지에서 조달	40	50	60	70	80	80	80
배터리 부품 (양극재, 음극재 등)	$3,750	북미 제조·조립	50	60	60	70	80	90	100

자료)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전문 및 관련 기사
주) '요주의 외국기업'이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2025년부터,
'요주의 외국기업'이 조립·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제외

미국은 기존 비용절감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국 중심으로 핵심기술과 생산설비를 배치하고 있다. 즉 경제블록 내에서 반도체, 전기차, 전기배터리, 의약품 등 첨

단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에는 첨단제품 공급을 차단하여 기술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과 서방 주도의 경제블록에 대응하여 브릭스 등 개도국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BRICs(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에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 의사를 밝혔고, 작년 베이징 브릭스 정상회담에는 알제리,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시이아, 태국 등 13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은 작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아랍 17개국이 참가한 제1차 중국·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자주독립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정보통신·인프라·식량 등 34개 협약(65조 원 투자)을 체결했고, 이어 12개국(튀니지, 이라크, 모리타니, 지부티, 카타르, 모로코, 소말리아, 바레인, 오만, 예멘, 레바논, 알제리 등)과도 양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랍국가들은 리야드 선언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독립 반대' 등 중국 입장을 지지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액의 25%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축통화 달러에 도전하는 흐름들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에서 위안화 및 루블 결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릭스도 달러 결제시스템을 대체하여 CIPS(위안화 결제시스템)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핑크 타이드를 주도하는 남미 좌파 정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동 통화계획으로 Sur라는 남미 단일통화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 아랍에미리트는 비석유 무역에서 루피화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4. 경제 블록화와 한국경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경제블록과 경제제재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이다.

미국의 대중, 대러 경제제재 조치는 첨단제품에서 범용제품까지 확산되고 있고, 원자재·중간재·최종재를 포괄하며, 투자·수출·수입·자본거래 등 다방면으로 적용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봉쇄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대외 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블록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의 전례 없는 무역적자와 수출감소의 구조적 원인은 미국과 서방이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중국·러시아를 배제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중국·러시아 경제제재 요구에 충실히 따르고, 경제블록으로 인한 기

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완화, 세금감면, 노동개악 등으로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가격이 싼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 대신 비싼 미국 LNG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 최근 난방비와 전기세 폭등은 미국, 호주 등에서 수입한 에너지의 높은 가격 때문이다. [그림8]을 보면 러시아의 에너지·원자재 수입이 심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8]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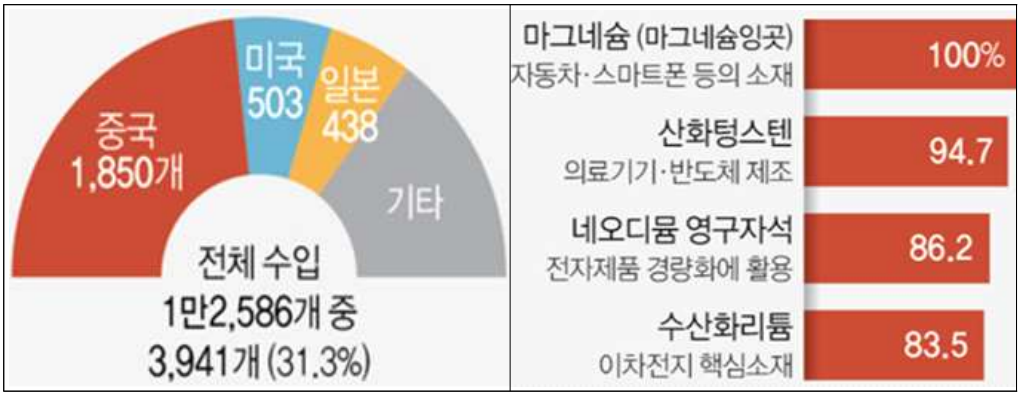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원부(2023.2.1)에서 재가공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칩4 동맹' 등에 따라 반도체, 전기차 등의 생산공장을 미국에 확장한다, 반면 중국 수출과 중국 현지공장(반도체장비 공급 금지) 사업은 줄여야 하므로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2023년 이후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국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자동차, 스마트폰 소재), 산화텅스텐(의료기기 등), 네오디뮴 영구자석(전제제품 경량화), 수산화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1,850개에 이른다([그림9] 참조).

정부는 무역적자와 수출감소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때문인데 이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재하다. 세계경제 침체는 한국경제 침체의 현상적인 원인이며, 근본적 원인에는 신냉전 경제블록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9]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특정국가 의존도 80%이상 수입 품목 수 / 수입 품목별 중국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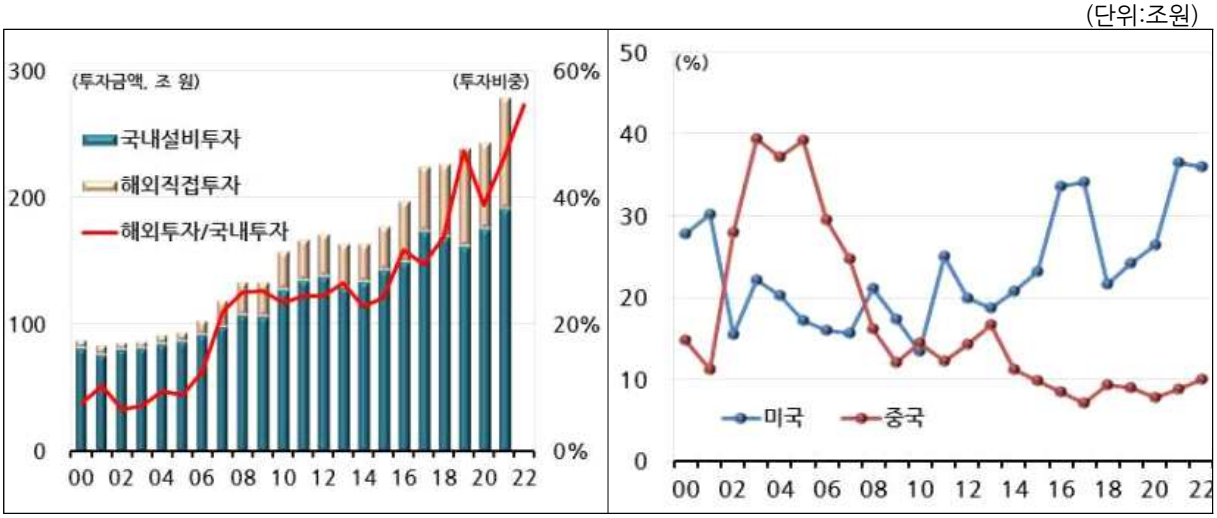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연합뉴스(2021.11.10) 재인용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한다'라는 전략하에, 수출 대기업 지원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부자감세', '노동개악' 등이 아니라 '중립외교', '핵심산업 국내생산', '재정확대로 민생지원' 등을 우선해야 한다.

[그림10] 국내설비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 대 미·중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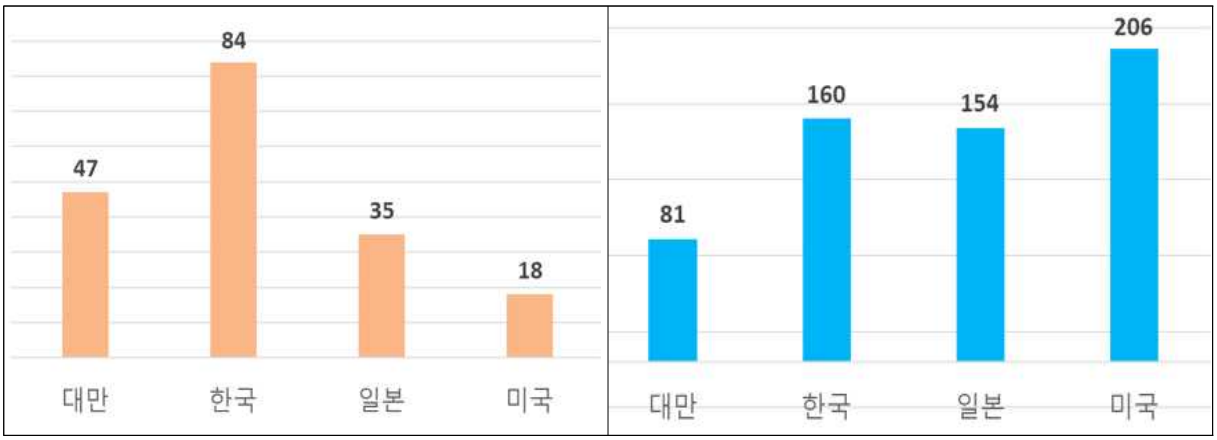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2023)
주) 2022년은 1~3분기 기준, 수출입은행 통계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계산

먼저 민중 생존권을 위해,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지·확대해야 한다. 과도한 해외투자

는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약화시킨다. 국내에 있어야 할 설비가 해외로 이전하면 고용, 세수, 연관산업, 지역경제 등이 축소되어 국내총생산이 감소한다.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2000년 7.6%에 불과했는데 2021년 46.3%, 2022년(1~3분기 누적) 54.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설비투자에서는 중국 투자가 정체되고 미국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림10]을 보면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심하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미중 간의 비중이 역전되었고 최근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23년 942호).

둘째 중립적인 외교통상 정책으로 경제주권을 지켜야 한다. 대중국 수출통제 제재가 전 산업에 가해지면, 한국은 GDP 6% 수준의 부가가치가 감소된다. [그림9]를 보면 대중국 수출통제 제재가 가해졌을 때 각국이 입는 피해인데, 전략산업(전기전자) 제재에서는 한국의 피해(84조원)가 가장 크고, 전산업에 대한 제재에서는 한국이 두 번째(160조원)로 크다(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2-07). 따라서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부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앞장서는 것은 무역적자와 수출감소를 재촉하는 길이다.

[그림9] 대중국 수출통제 제재가 가해졌을 때
전기전자 부가가치 감소 / 전산업 부가가치 감소 (단위 : 조 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2022)

셋째 세계경제 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한동안 수출감소는 불가피하므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줄어든 만큼 내수 확대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거품 붕괴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정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한국은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집값 하락은 소비를 위축시킨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부채상환 연장과 금리 조정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주택

자 혜택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부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친기업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과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2023년은 난방비, 전기세, 교통비, 휘발윳값 등이 폭등하여 코로나 재난 시기에 버금가는 재난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끝).